경제/경영
발표논문 02

행복은 성적 순(?):
입시체제에 대한 평가와 진단[1)]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으로 우리 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아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의 경쟁적 풍토 역시 '양질'의 산업역군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데 기여해 온 면이 크다. 하지만 과열 입시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게다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종합적 분석능력과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의 배양을 어렵게 하여 21세기 지식기반경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경쟁의 이면에는 고착화된 대학서열구조와 유수 대학 입학이 가져오는 소위 '학벌' 효과가 그 기저에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학력고사와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균일한 평가 잣대를 활용하여 해당 연도 모든 수험생들의 학업성취도 순위를 일괄적으로 배정해 온 바 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대학의 서열에 맞추어 상위권 대학(학과)부터 하위권 대학(학과)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됨으로써, 대학입학시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선별효과(selection effects)가 극대화된 것이다. 출신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대우는 결국 대학입학시험에 따른 선별효과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벌'효과의 생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근본적 처방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우리나라의 대학서열구조와 학벌효과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은 '서열지도'로 요약된다. 본 서열지도는 정시 배치기준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요 4년제 대학들의 합격 가능 예상 수능점수(표준점수 기준)를 표기한 것이다.[2)] 국내 160여 개의 대학들이 각각 입학생들의 평균

1) 본고는 본인이 공저한 『한국보고서: 교육(2018)』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본인의 기고문(2018년 6월)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힘.

2) 2013년도 진학사 배치표를 활용함. 2013년 이후의 배치표 역시 큰 틀에서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음. 각 대학별로 예상 수능점수 최고 학과와 예상 수능점수 최저 학과를 찾은 뒤, 이 두 예상점수의 중간값을 해당 대학의 대푯값으로 활용함. KAIST와 POSTECH은 정시 모집은 없으나 서울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간주함. 상세한 사항은 김영철·김희삼(2012)의 제1장 참조.

수능점수에 따라 수직적으로 길게 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공계로 특화된 지방의 일부 유수 대학(KAIST, POSTECH, UNIST 등)을 제외하고,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이 대학 서열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전체적으로 속칭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들과 수도권의 상위 대학 간에는 표준점수 상으로 무려 100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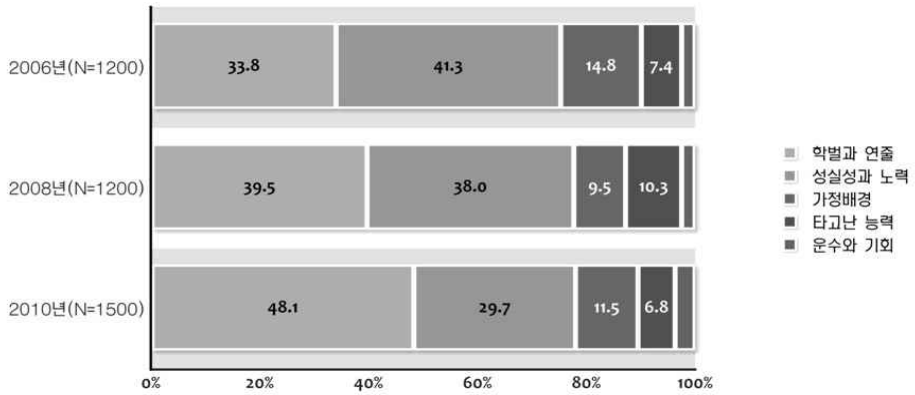
<표 1> 대학입시의 서열지도(수능점수 기준)

수능 표준 점수	인문계 대학 서열			자연계 대학 서열		
	서울	경인	지방	서울	경인	지방
550	●					
545						
540	●●●					
535	●●●					
530	●●●●			●		●●
525						●
520	●●●●	●	●	●●●		
515	●	●		●●●		●
510	●●●	●		●●●		●
505	●●●	●●●●●	●	●●●	●	
500	●●●●		●●	●●	●	
495	●●	●	●	●●		
490		●●	●●●●●	●	●●●	
485	●		●	●●●●	●●●	
480	●●	●	●●	●●		●●
475		●●	●●●●	●		
470	●		●●●●	●●	●	
465		●●	●●		●●	●●●●●
460		●●●	●●●●●	●●	●●	●●●
455	●	●●	●●●●	●	●	●●●●
450			●●●●●●		●●●	●●
445		●●	●●●●●●●		●●	●●●●
440			●●●●●●●			●●●●●●●
435			●●●●●●●●●●●		●●●	●●●
430			●●●●●●●		●	●●●
425			●●			●●●●●●
420		●	●●●●			●●●●
415			●●●●●●			●●●●●●●
410			●●●●●●●			●●●●●●●●●●●
405			●●●●			●●●●●●●●●●●●
400		●	●●			●●●●●●●●●●
395			●●			●●●●●
390			●			●●●●●●●●●●
385						●●●●
380						●
375						
370			●			

주: 1) 2013학년도 정시 지원배치표(진학사)상의 언/수/외/탐 합산 표준점수 기준임(단, 언/수/외/탐 합산 점수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동일 선상에 위치한 언/수/외/탐 기준 점수를 활용함).
2) 예상 수능점수 최고 학과와 예상 수능점수 최저 학과를 찾은 뒤, 이 두 예상점수의 중간값을 해당 대학의 대푯값으로 활용함.
3) 예상점수가 유달리 높은 인문계의 경영 관련 학과(금융, 회계 등)와 교육관련 학과 및 자연계의 의약학·보건 관련 학과(의대, 약대, 간호 등)는 제외함.
4) 또한, 예상점수가 대체로 낮은 종교 관련 학과 및 야간대도 제외함.

우리나라의 각종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출신대학의 학벌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연줄(학연)이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확연히 드러난다. 2010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무려 48.1%가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그림 1 참조). 2006년의 경우 이 비율이 단 33.8%에 그쳤음에 견주어 보면, 추세적으로 '학벌과 연줄'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성실성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의 41.3%에서 2010년 29.7%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2011년)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58.3%의 응답자들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답하였고, '일부 존재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그림 1]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 요인



주: 1) 질문 내용: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성공 또는 출세하는 데에 어느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2) 전국 16개 시도의 성인 남녀(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1,500명(2010년 이전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 교육여론조사

이처럼 고착화된 대학 간 서열과 학벌효과가 강하게 존재하는 한, 대학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를 위한 사교육 투자는 쉽게 통제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사교육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의 과제는 결국 대학서열 및 학벌의 형성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II. 통계적 차별과 노동시장 이중 선별구조

우리나라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위한 선별 과정(screening process)은 대학입시 단계의 1차적 선별과 대학 졸업 이후 입사 단계의 2차적 선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 선별구조(dual screening structure)와 구직과정에서의 신호 기제(signaling)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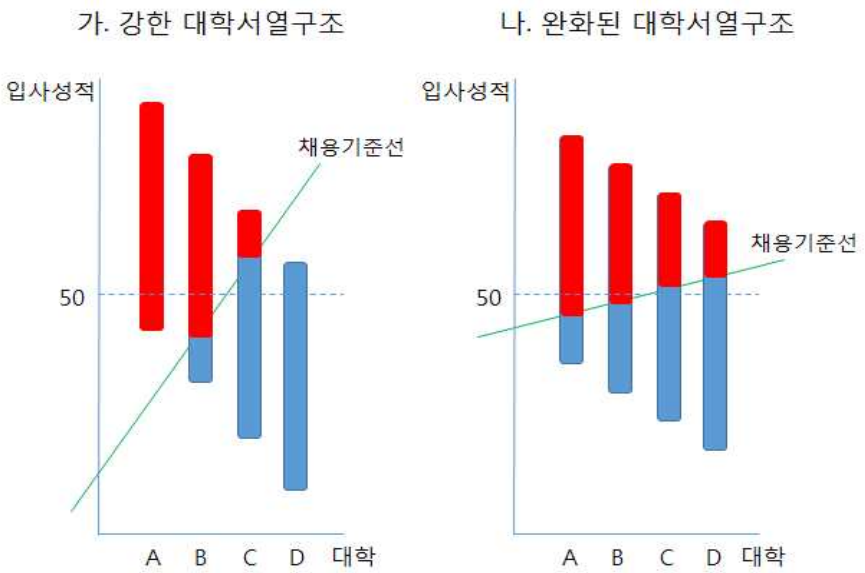
로 입시체제와 노동시장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구직자의 신호는 크게 전문지식, 품성, 일반소양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출신대학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집합적 평판(collective reputation)으로 구분된다. 개인의 생산성은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나,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각 개인의 내재적 가치를 정확히 분별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정확성(information uncertainty)으로 인하여, 각 기업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의 집합적 평판을 심사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채용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입학시험의 인적자원 선별기능이 강한 나라에서는 출신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 곧 '학벌'이 채용과정에서 유용한 선별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선별과정으로 인하여 입사 지원자들은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설령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지원자라 할지라도 학벌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고 일컫는다. 정보가 제한된 상황 하에서 채용담당자들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적격자들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흔히 언급되는 '기호에 따른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 즉 타당한 근거없이 무작정 행사되는 차별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통계적 차별은 이를 경험하는 각 개인에게는 부당한 일이지만, 채용 당사자인 기업에 있어서는 비대칭적 정보 구조 하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한다.

[그림 2]은 대학서열구조가 강한 경우와 보다 완화된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학벌효과를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 B, C, D 대학 순으로 입학자원의 질적이 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이 기업의 채용과정 임할 때, 역시 A, B, C, D 대학 순으로 졸업생들의 '입사성적' 분포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날 것이다. (단, 여기서의 '입사성적'은 출신대학의 '간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정보를 활용한 채용과정에서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한편, 채용담당자가 각 지원자의 채용여부를 결정할 때는 순수하게 입사성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입사성적이라는 정보가 각 지원자의 적격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담당자들은 출신대학에 대한 집합적 평판(즉, 졸업생들의 평균적 자질)을 보조적인 선별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채용기준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A, B 대학의 졸업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잣대를, C, D 대학 졸업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잣대를 요구한다. A, B 대학 졸업생들은 출신대학의 평판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는 반면, C, D 대학의 졸업생은 이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대학서열구조에 따른 학벌효과의 차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이 해당연도 졸업생의 절반을 채용한다고 하자. 출신대학의 간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입사성적이 50점 이상인 지원자들은 모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출신대학이 고려되는 경우, A, B 대학 졸업생들의 채용기준선은 50점 이하로 설정되나, C, D 대학 졸업생들의 채용기준선은 50점을 상회하여 설정된다. 타고난 능력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A, B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우량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타고난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C, D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대우는 자연스럽게 A, B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을 촉발하게 된다. 동일한 능력을 타고난 경우에도,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대우와 이로 인해 양산되는 입시경쟁은 '패널 나'와 같이 대학서열구조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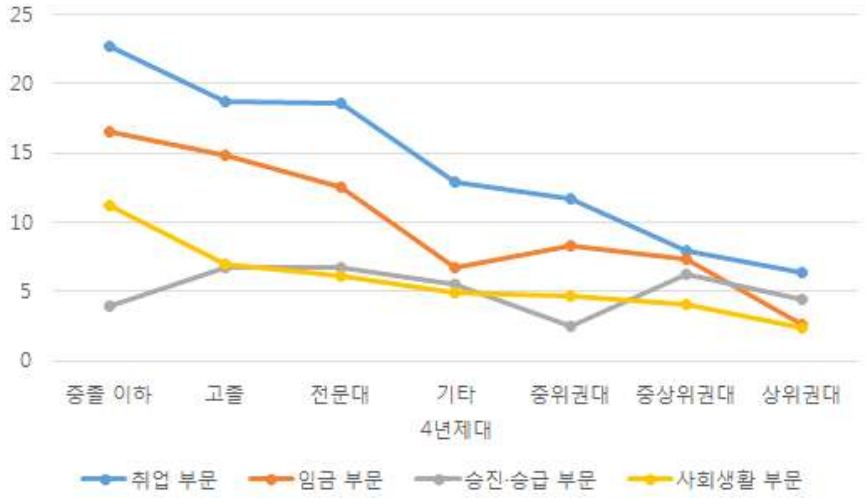
III.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의 주관적 차별경험 현황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취업자들의 주관적 차별경험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학벌의 영향력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체 응답자들의 '학벌' 변수를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성해 보자: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3), 기타 4년제대(4), 중위권대(5), 중상위권대(6), 상위권대(7).[3] 한국노동패널 7차 조사에서는 취업, 임금, 승진·승급 및 여타 사회생

3) 4년제 대학의 '학벌' 분류에는 진학사의 1995학년도 대학 및 학과별 수능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상위권 대학에는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한 10개 대학, 중상위권 대학에는 건국대, 경북대 등 30개 대학, 중위권 대학에는 카톨릭대, 강원대 등 40개 대학이 포함됨. 상세한 분류는 김영철·김희삼(2012)의 부록 4 참조.

활 부문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 특별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각 '학벌' 집단에서의 주관적인 차별경험의 차이를 제시해 준다. 설문의 유효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주관적) 차별경험자의 비중을 확인해 보면 취업부문에서는 18.1%, 임금 부문에서는 13.2%에 달한다. 승진·승급 부문과 여타 사회생활 부문에서도 이 비중이 각각 5.6%와 7.7%에 이른다.

[그림 3] 각 학벌단계별 차별경험자의 비중



주: 각 부문별 유효응답자를 대상으로 차별경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각 부분별 유효응답자의 수는 다음과 같음: 8,498명(취업), 8,504명(임금), 7,506명(승진·승급), 10,863명(사회생활).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7차)

[그림 3]에 요약된 바와 같이, 학벌이 좋을수록 각 부문에서의 (주관적) 차별경험자 비중이 체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의 경우, 전문대 출신은 18.6%가 부당하게 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한 반면, 상위권 대학 출신들은 그 비율이 6.4%에 그쳤다. 임금의 경우, 전문대 출신의 차별경험률이 12.6%에 이른 반면, 상위권 대학 출신들은 단 2.6%에 그쳤다. 사회생활 부문에서의 차별경험률 역시, 전문대 출신은 6.1%였으나 상위권 대학 출신은 단 2.4%에 그쳤다. 4년제 대학 내에서도 '기타 4년제대' 출신들과 국내 상위권대 출신들 간에는 차별경험자의 비중에 있어, 각 부문별로 약 2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승진·승급 부문의 경우에는, 학벌에 따른 명확한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4년제 대학 출신들에 비해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들의 차별경험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4)]

다음으로 <표 2>는 노동시장 차별에 대한 학벌의 순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신장, 나이, 성별,

4)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애초에 승진·승급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차별경험율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거주지역 및 출생지역 등의 변수를 통제한 뒤의 분석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학벌(7단계)이 한 단위 개선되었을 때, 취업과 임금 부문에서의 차별경험률이 각각 3.6%p와 3.0%p나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생활 부문에서의 차별경험률 역시 1.4%p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승진·승급 부문에서는 학벌의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분석대상을 대졸자로 한정하였을 때는 이 부문에서도 1.0%p의 차별경험률 하락이 관측되었다.[5] 한편,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본 분석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신장이 10cm 더 클 때, 취업과 임금 부문에서의 차별경험률이 각각 2%p와 3%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에서의 차별경험률 역시 1%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표 2> 학벌에 따른 주관적 차별경험률(한계효과)

(Logit 분석)	취업 부문	임금 부문	승진·승급 부문	사회생활 부문
학벌(7단계)	**-3.6*** **	**-3.0*** **	**-0.2**	**-1.4*** **
신장(cm)	-0.2***	-0.3***	-0.1	-0.1**
나이(만)	-0.2***	-0.2***	0.0**	0.0
성별(여성)	-5.3***	-3.9***	-2.5***	-1.8**
거주지역 통제	예	예	예	예
출생지역 통제	예	예	예	예
평균치에서의 차별경험률(%)	16.8	11.9	5.5	6.7
유효응답자 수	7,400	7,406	6,540	9,315

주: 1) 학벌(7단계)는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3), 기타 4년제대(4), 중위권대(5), 중상위권대(6), 상위권대(7)로 설정됨.
2) '평균치에서의 차별경험률(%)'은 각 변수의 평균치를 지닌 응답자의 차별경험률 추정치임.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4~8차연도 자료

IV.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 및 정규직 비율 격차

'학벌'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노동시장 내의 성과 차이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4]에는 각 학력수준 별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수입을 정리하고 있다.[7]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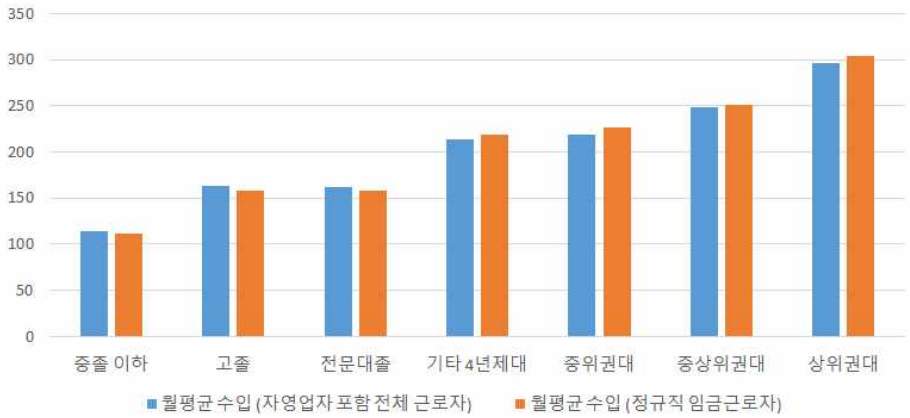
5) 보다 상세한 분석은 김영철(2015) 참조.

6) 그 외에 성별이 여성인 경우 각 부문에서의 차별경험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의 직업적 특성(저학력·저임금 일자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대졸자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경우, 대졸 여성들이 대졸 남성에 비해 임금 및 승진·승급 등에서 크게 차별받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임금 부문에서의 대졸 여성 차별경험률은 대졸 남성에 비해 5%p 높았으며, 승진·승급 부문에서도 4.1%p나 높게 나타남. 김영철·김희삼(2012)의 제4장 참조.

7) 한국노동패널조사(7차, 2004년도) 기준임. 한국노동패널이 1998년도에 도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기에

따르면, 중졸이하와 상위권대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2배를 크게 넘어선다.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수입 역시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수입이 단 110만원 안팎에 그쳤으며,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대략 월평균 수입이 160만원대에 그쳤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상위권대 졸업자의 경우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월평균 약 300만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수치들은 개인의 능력 등의 변인을 통제한 결과는 아니지만, 동일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진학 대학에 따른 노동소득의 격차가 상당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림 4] 학력수준별 월평균 근로 수입 비교



주: 월평균 수입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함.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는 총 5,620명이고, 정규직 임금근로자 응답자는 총 3,290명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7차, 2004년도 조사자료)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 등을 제외하고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월수입이 자영업자들의 평균 월수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전문대졸 및 그 이하 학력수준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목격되었다. 즉,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반면, 전문대졸 및 그 이하의 학력수준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높은 월평균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5]에서는 임근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을 각 학력수준별로 정리해 보았다. 역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정규직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단 50% 안팎에 그쳐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약 70%, 전문대졸과 기타 4년제대 졸업의 경우에는 약 80% 안팎에 이르렀다. 중위권대

지나치게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응답 대상의 노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음. 학력수준별 평균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평균 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수입 근로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함. 단, 이들까지 추가할 경우에는 학력수준별 임금 격차가 보다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졸업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대략 90%에 이르러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크게 우세하였다.

[그림 5] 학력수준별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비교

주: 전체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는 총 4,254명이고, 이중 만 40세 이하인 경우는 총 2,501명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7차, 2004년도 조사자료)

세대별로 학력수준 혹은 노동시장의 양태가 크게 다를 수 있어 동일한 분석을 만 40세 이하에 한정하여 진행해 보았다. 그림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학력수준별 정규직 비율의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권대 졸업 이상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약 88% 안팎으로 나타난 반면, 고졸의 경우에도 정규직 비율이 약 76%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학력수준별로 정규직 비율의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동일하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기타 4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정규직 비율이 단 80%에 그쳐 '학벌'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8)]

이상의 학력수준별 월평균 임금 및 정규직 비율의 격차가 오롯이 '학벌'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경쟁이 치열한 교육현장에서는 학력수준이 평균적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과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보다 높은 학력수준은 보다 높은 내신등급/수능(학력고사)성적에 의해 가능하고, 이는 평균적으로 보다 유능한 지적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하여 중졸이하 보다는 고졸 이상이, 고졸보다는 대졸 이상이, 하위권대보다는 상위권대 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능력의 차이가 현재 드러나는 임금의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학벌에 따라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경험이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개연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방 사립대 졸업자가 대기업에 원서 접수하였을 때,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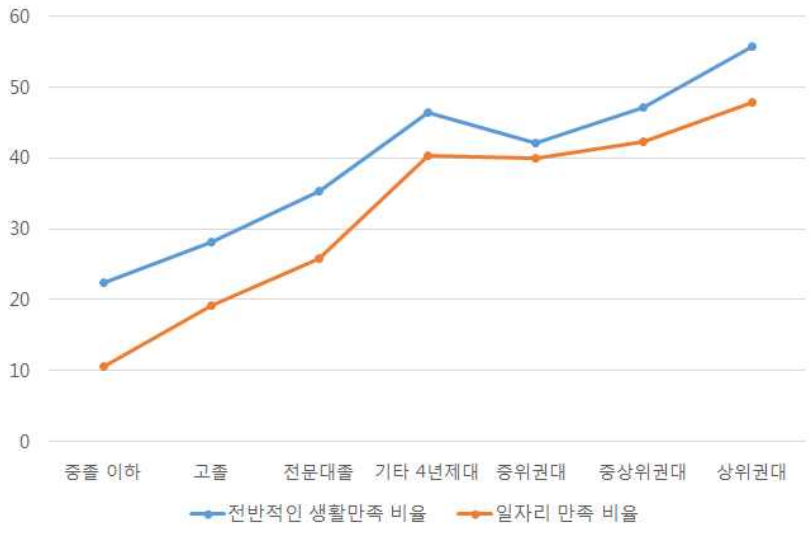
8) 아울러 정규직 비율에 있어, 기타 4년제대 졸업자가 전문대졸보다 오히려 낮고, 또한 상위권대 졸업자가 중상위권대 졸업자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됨. 예상과는 다른 이러한 특이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파악이 요구됨.

상위권대 졸업자보다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기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면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 '전문대졸 이상 지원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막연히 SKY 등 명문대 졸업자를 선호하는 일부 기업의 채용 행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통계적 차별이 만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동일한 능력이더라도 출신 대학(혹은 대졸 여부)에 따라 그 처우가 달리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어는 이름없는 지방 사립대를 나와서는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그 기량을 펼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학력수준별 노동시장 내 성과의 차이가 상당부분 개인의 타고난 능력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학벌에 따른 기회의 차이가 뚜렷한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벌 효과'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V. "행복이 성적 순"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한국사회에서 '학벌'의 효과는 앞서 언급한 임금 등 노동시장의 성과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요소가 그 절대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넘어서서 가정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영양력을 확대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리서치(2014년 12월)의 설문에 따르면, '학력이 좋을수록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쉽다'란 질문에 82.8%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 정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질문에도 76.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질문에 무려 85.7%가 '그렇다'고 답하였다.[9)]

[그림 6] 전반적인 생활만족 및 일자리 만족 비율



주: 각 부문별 유효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을 표시함. 각 부분별 유효응답자의 수는 다음과 같음: 11,590명(전반적 생활만족), 6168명(일자리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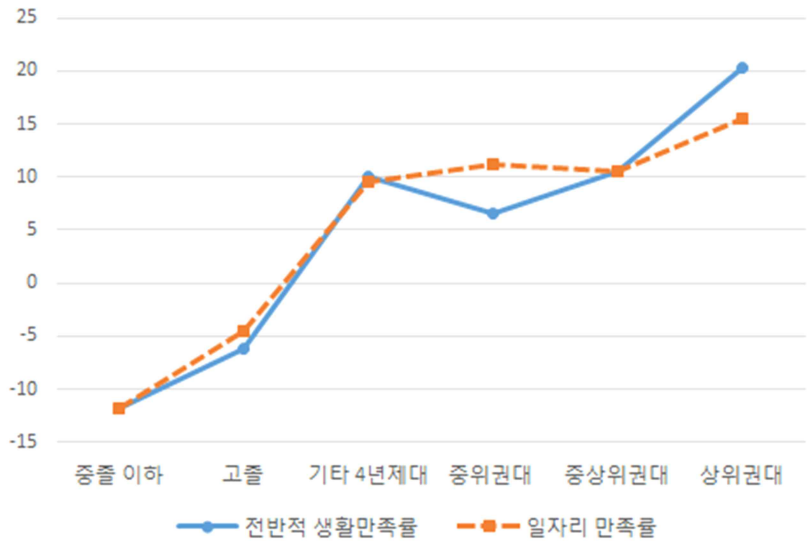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7차)

9) 한국리서치와 한국일보 공동 주관의 20~59세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2014년 11월 20~24일 진행)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생활측면에서의 전반적인 만족 여부와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 여부 모두 학력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10] 여기서 살펴보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여부'에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아성취, 명예, 안정감,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직장 및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 여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림 6]에 표시된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 비율이 40%를 넘는 반면, 고졸인 경우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권대 졸업생의 경우 무려 55.7%에 이른다.

또한, 같은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일자리 만족 비율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0%를 넘는 반면, 고졸인 경우 단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위권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무려 47.9%에 이르렀다. 대략 절반가량은 지금의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는 단순히 임금수준 및 일자리의 안정성을 넘어서서 업무환경, 복지수준, 전공과의 일치, 동료관계, 사회적 인정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 임금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학벌의 만족률 상승효과 (기준: 전문대 졸업자)



주: 1) 로짓(Logit) 분석을 활용하여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적인 일자리 만족률을 기준으로 다른 학력수준의 만족률 증감을 표시함.
2) 소득과 종사상 지위 등 경제적 보상 변수를 통제한 후의 만족률 효과를 표기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7차)

[그림 7]는 임금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학력(학벌)의 순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이다. 성별, 신장, 나이, 거주지, 만 14세 성장지 등 일반적인 개인별 특성변수를 통제하고 동시에 소득수준과 종사상의 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로 구분) 등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의 변수 역시 통제하였

10) 김영철(2015) 참조.

다. 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즉 '만족 만족스럽다'고 답할 확률)이 10%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인 경우에는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이 5%p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임금 등 경제적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학벌에 따른 만족률 상승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에 따르면, 상위권대(입학성적 상위 10개대) 졸업생의 경우 타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만족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 만족률에서는 무려 10%p가량의 추가 상승이 확인되었고,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에서도 약 5%p가량의 추가 상승이 관측되었다. 학계에 이미 알려진 바 있는 소위 '명문대 임금 프리미엄'이 만족률 측면에서도 재확인되는 것이다.[11]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국내 상위권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현명한' 방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셈이다. 성적우수 수험생들의 광범위한 재수현상, 대학 내 우수 장학생들의 상위권대학 편입 풍토, 사교육 내 강화학습(reinforcement study) 성향 등 국내 입시에서는 여타 선진국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특이 현상이 다수 존재한다.[12] 만족도 측면에서의 상위권대 프리미엄은 이러한 특이 현상에 대한 배경적 원인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VI. 소모적 입시경쟁과 취약한 고등교육 경쟁력

우리나라의 경직된 대학서열구조는 여타 선진국의 대학체제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호주와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가주도의 평준화된 대학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대학 간의 서열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영미권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 간 서열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13]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사실상의 자격고사 방식으로 대학입학시험(GCE A Level)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부 명문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대학 간의 촘촘한 서열 질서가 생성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과 명문 주립대(UC 계열 등),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s) 등이 폭넓게 상위권 대학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피라미드식 서열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여타 주립대 출신이더라도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자기발현의 기회가 주어진다. 종합하자면,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이 '대학입시'라는 1차적 선별보다는 '입사 단계'라는 2차적 선별에 크게 집중된 양상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입시 준비보다는 미래 직업을 위한 자기역량 강화와 대학과정을 통한 자기계발 노력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

11) 명문대의 임금 프리미엄을 확인한 연구로는 이경희・김태일(2007) 및 김진영(2007) 등이 있음.

12) '강화학습(reinforcement study)'이란 '보충학습(remedial study)'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사교육 등 교육투자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현상을 일컬음.

13) 세계 주요국가의 입시체제 및 대학서열구조에 관해서는 김영철·김희삼(2012)의 부록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총점경쟁 방식의 입시에 따른 노동력 자원의 수직적 분류가 대학 간의 견고한 서열질서를 창출해 왔다. 물론 이러한 입시문화가 이제까지 부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해 온 것은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입시를 향한 초·중등교육의 전일적인 경쟁 풍토가 일정 수준의 지적훈련을 이수한 대량의 산업역군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초중등 단계의 교육현장이 지나치게 입시경쟁에 예속되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어 왔다. 또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수업과 암기식 학습은 종합적 사고력과 비판적·창의적인 사고력의 배양을 어렵게 하여 21세기 지식기반경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반의 교육자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할 대학단계의 교육에 집중되기 보다는 상당부분 대학입시 이전의 1차적 선별과정에 소모적으로 소진되는 양상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정부추산(초·중·고교 재학생 한정, 방과후학교/EBS 비용 등 제외)으로만 20조원대에 이르렀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교육 투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성적 수준별 사교육 지출 현황

(학급단위 고정효과모형) 기준: 성적 최하위	사교육 비용(만원)	사교육 시간(주당)
성적 하위	**8.1 *****	**1.3 *****
성적 중위	**14.7 *****	**1.9 *****
성적 상위	**22.7 *****	**2.4 *****
성적 최상위	**24.2 *****	**2.6 *****
맏이 여부	7.9 ***	0.5 *******
여학생 여부	1.7 *	−0.1
가구소득 및 자녀수 통제	예	예
부모 학력·연령·취업여부 통제	예	예
관측 학생수(학급 수)	38,384 (1,189)	38,384 (1,189)

주: 1) 각 학생의 성적 등급은 각 학교별 성적 기준으로 최상위 10%, 상위 20%, 중위 30%, 하위 20%, 최하위 20%로 배정함.
2) 성적 수준의 사교육 효과는 가구소득 수준, 부모 학력, 부모 취업 여부, 부모 연령, 성별, 맏이여부, 총 자녀 수가 모두 통제된 뒤 도출된 분석결과임.
3) 표본추출방식으로 전국 초·중·고교 1,012개교 학부모 약 44,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임.
4)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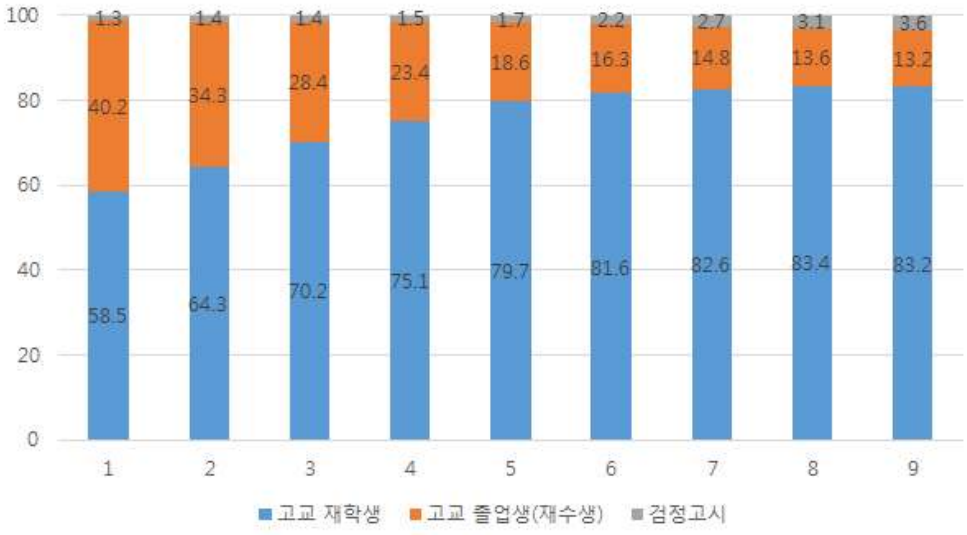
자료: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김영철・김희삼(2012) 인용

<표 3>에 요약된 바와 같이, 직전학기 성적을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해 볼 때, 직전학기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사교육 투자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

성적이 하위, 중위, 상위,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그다음 3개월간의 사교육비가 (최하위권 학생의 사교육 비용과 비교하여) 각각 8.1만원, 14.7만원, 22.7만원, 24.2만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역시 성적이 하위, 중위, 상위,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최하위권 학생의 사교육 시간과 비교하여) 각각 1.3시간, 1.9시간, 2.4시간, 2.6시간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의 사교육이 정규교육에서 뒤쳐진 학생들을 위한 보충학습(remedial study) 차원에서 공급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은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적 반복학습 및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소모적 점수경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14)]

또한,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생 중 재수생의 비율도 무려 21.6%(2011학년도 기준)에 이른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대략 절반가량의 고교 졸업생들이 재수(반수)에 도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8]는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수리영역의 각 등급별 재수생(고교 졸업생)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9등급을 취득한 학생 중에는 재수생의 비중이 단 13.2%에 그치지만, 1등급을 취득한 학생 중에는 무려 40.2%에 이른다.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재수생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는 역설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가 상당 부분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소모적 경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림 8] 수학능력시험 등급별 응시생 구성(수리영역 기준)



주: 수능시험 각 과목별 성취 등급은 9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임.

자료: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김영철・김희삼(2012) 인용

14) 한편 분석에 따르면, 해당학생이 맏이인 경우 사교육 비용은 7.89만원, 사교육 시간은 0.5시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1.7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결과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영철·김희삼(2012) 참조.

게다가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진학하는 대학의 서열이 결정된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요약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1학년 기준)의 주당 평균 자습시간은 5.4시간으로 고등학생(1학년 기준)의 주당 평균 자습시간인 10.3시간의 단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주당 자습시간은 약 9.5시간으로 미국 고등학생들의 주당 자습시간인 4.9시간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입시까지이고, 막상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함양해 나가야 할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노력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능성적 상위 분위의 학생들일수록 고등학교 시기에서 대학 시기로 넘어오면서 학습시간의 하락폭이 유난히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능 10분위에 속한 학생들의 하락폭은 주당 무료 7.45시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서열에 안주하여 이전에 비해 충분한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15)]

<표 4> 수능성적 분위별 대학 시기와 고교 시기의 주당 자습시간 비교

(단위: 시간, %)

수능성적 분위[1)]	대학생 자습시간(A: 1학년 기준)	고교생 자습시간(B: 1학년 기준)	고교 대비 대학에서의 자습시간 비율 (A/B)	대학 진학 후 자습시간의 하락폭(B-A)
1	**4.09**	7.01	58.3%	2.92
2	**4.04**	7.91	51.1%	3.87
3	**4.53**	8.46	53.5%	3.93
4	**4.73**	9.41	50.3%	4.68
5	5.86	9.81	59.7%	3.95
6	5.60	10.44	53.6%	4.84
7	6.17	11.01	56.0%	4.84
8	5.92	11.41	51.9%	5.49
9	5.97	12.97	46.0%	7.00
10	7.13	14.58	48.9%	**7.45**
표본평균[2)]	5.40	10.28	**52.5%**	4.88

주: 1) 수능성적 분위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함.
2) 대학 1학년 시기와 고교 1학년 시기의 자습시간이 모두 파악된 2,41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교육종단연구 제4, 6, 7차 조사 자료. 김영철・김희삼(2012) 인용

더욱이 현재의 '줄 세우기'식의 입시체제는 대학 간의 진정한 경쟁구도의 형성 역시 가로막아 왔다. 각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상당 부분 입학자원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15) 한편, 수능성적 중하위권 이하 대학생들의 주당 자습시간이 5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루 평균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이러한 저조한 학습량은 비록 고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더라고 그에 합당한 일자리는 얻지 못하리라는 열패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상황에서는 대학들이 질 높은 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할 인센티브가 크게 높지 않다. 타 대학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현재의 견고한 서열구조 하에서는 시장에서의 상대적 평가를 뒤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나친 서열화는 '졸업생 평판'에 대한 대학 간 경쟁구도를 훼손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일례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위시한 명문 사립대들 간에는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향한 끊임없는 견제와 선의의 경쟁이 지속되는데, 이는 이들 대학의 입학자원 간에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은 데서 비롯된 바 크다. 교육내용의 차별적 공급에 따라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도 건강한 경쟁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VII. 구체적 정책방안의 모색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 내의 고질적 과잉 사교육과 학벌주의 행태는 대학입시체제의 변별력과 직결된 문제이다. 대학입시가 1차적 선별기능을 강하게 수행할수록, 출신대학의 평판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평판 효과' 외에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노동시장 내의 '연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김영철(2011)에 따르면, 국내 취업의 약 60%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성사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연줄의 영향력이 큰 아시아권 경제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 출신들은 '학연'에 의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입시의 변별력이 강하여 우수 인적자원이 소수의 대학에 집중될수록 더욱 강화된다.

말하자면, 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당장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벌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입시경쟁의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양산하게 된다. 동일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출신대학에 따라 노동시장 내의 대우가 크게 달라진다면 (혹은 '학연'에 따른 기회의 차이까지 발생한다면), 보다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적극적 경쟁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라 볼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입시사교육과 선행학습 자제, 불필요한 재수 자제 등을 외치더라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따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과열 입시경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면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 진단 및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벌사회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왜곡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의 '이중' 선별구조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선별과정이 '대학입시'라는 1차적 선별에 크게 집중된 양상을 개선하고, '입사단계'라는 2차적 선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는 입시체제의 개편, 대학서열구조의 완화, 국민의 의식개혁 및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학 간 서열구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 즉 대학 간 수평적 평준화의 완성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모든 대학이 '평범한' 수준의 대중적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월성 교육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정도의 대학 간 차등, 혹은 평준화된 다수의 대학과 일부 엘리트 대학의 공존 등 다양한 형태의 건강한 다층화는 오히려 장려할 부분이며 그 긍정적 가치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간 물적·인적 토대의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서열구조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대다수 나라처럼 국가주도형 고등교육 정책을 펼쳐 왔다면, 교육용 가용자원의 축적에 있어 대학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의존적인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민간 의존형 고등교육 하에서 대학 간 질적 격차가 자연스레 공고화된 셈이다.

덧붙여, 학벌효과가 일정부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투자 및 중·고등학생들의 높은 향학열 및 학구욕을 북돋는데 기여해 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학 간 수평적 평준화가 달성될 경우, 입시경쟁이 사라지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높은 학구열 역시 사그라지는 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예견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의 강한 서열구조가 양산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이에 '그림 2' 에서와 같이 다소 완화된 형태의 서열구조로 이동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 양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한, 점진적 입시개혁을 통한 서열구조의 완화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이며, 그 긍정적 효과도 분명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어떠한 입시개혁이 가능한가? 대입전형이라는 1차적 선별과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요한 선별도구인 수학능력시험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의 대학 간 서열화가 전국단위 학력고사 및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총점경쟁식 '줄세우기'에서 비롯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매년 입시철에 반복되는 '배치표'의 범람은 전국단위 대입시험에 따른 대학 간 '줄세우기'의 적나라한 단상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험 등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입결 등수'까지 매겨온 이제까지의 구태를 장기적으로 타파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 변화의 과감성 정도에 따라 (1) '쉬운 수능' 정책 기조의 유지, (2) 수능등급제의 재도입, (3) 수능의 절대평가체제로의 전환, (4)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을 들 수 있다.[16)]

(1) '쉬운 수능' 정책은 수능의 난이도를 통제(예: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확보)하거나 EBS

16) 대입제도 개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영철·김희삼(2012) 제6장 참조.

수능교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서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주요한 정책 기조로 유지되어 왔다. 종종 '물수능' 논란과 함께 시험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대학서열구조를 개선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되는 정책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변별력이 여론에 밀려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면, 결국 수능시험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을 증폭시키고 불안감에 편승한 입시경쟁만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제껏 '물수능'과 '불수능'을 오가는 오락가락 수능정책의 향방은 우리나라 입시당국자들의 근본적 고민의 부재 및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수능등급제는 2008학년도 수능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대학서열구조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과 일부 상위대학의 적극적 반발로 인해 단 한차례의 시행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갑작스러운 등급제 시행에 승복하기 힘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컸다. 그러나, 이후 수시전형이 크게 확대되고 수능성적이 최저 학력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사실상의 수능등급제'가 시행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따라서, 변화된 입시환경에 발 맞춰 수능등급제의 재도입을 재차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등급제를 시행하더라도 1등급을 상위 4%에 한정한 현재의 9등급제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가급적 9등급제를 5~7등급제로 완화함으로써 상위권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과목 1등급 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 유치 경쟁 역시 제어할 필요가 있다.

(3) 수능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영어와 한국사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절대평가 방식은 무한 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긍정적이다. 또한, '수학능력' 검증으로서의 수능시험 본래의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절대적 성취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므로, 자연스럽게 상위 1, 2등급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고, 등급에 따른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대학 간 서열화 완화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그 일년 뒤 영어 역시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절대평가의 점진적 확대는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서열구조 완화에 대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도 절대평가의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다.

(4)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수능으로 인한 1차적 선별의 강도를 가장 확실하게 개선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수능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장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자격고사화된 수능에서는 절대적 성취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각 과목의 등급(5~7등급)이 부여된다. 일종의 '자격증'이므로 특정 연도에 취득한 각 과목의 수능등급은 다른 연도의 대입전형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제도적 뒷받침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미국의 SAT처럼 과목별 응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전 과목 당일 평가에 따른 고부담(high-stake)의 폐해

역시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17]

더불어, 아직은 요원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의 활성화도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통하여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는 고졸 취업 이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추가로 습득하고자 해도 선뜻 대학 진학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한창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수능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능의 장애물로 인해, 취업을 선호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조차 우선은 대학 진학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하고자 해도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고등학교 시절에 취득해 둔 수능 등급을 이용하여 '수능시험'을 당장 치루지 아니하고서도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먼저 취업하는데 따른 심적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수 있다.[18]

한편, 위에서 제시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능시험의 선별효과가 크게 완화될 경우에는 우수 고교 졸업생을 앞서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의 추가적 경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즉, 상위대학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대학별 고사(혹은 논술전형)를 강화하면서 대학입시의 변별력을 끌어올리고자 기를 쓰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수능 변별력 약화의 효과는 감쇄하고, 대신 과거 본고사 체제에서 나타난 입시과열 현상이 오히려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논술고사 혹은 구술고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사전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19]

수능제도의 개편과 함께 내신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더라도 내신에서의 과당 경쟁과 이에 따른 1차적 선별의 강화가 지속된다면 대학 간 서열구조의 완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6단계 A/B/C/D/E/F)'의 적극적 활용이 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성취평가제는 2017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대학입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였다. 학기 중 평가는 성취평가 방식의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대학입시 원서에서만은 상대평가 '내신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한편, 특목고/자사고 등 국내 특유의 고교서열화 문제로 인하여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이 오히려 일부 고교서열 상위 재학생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결국 현 정부는 즉각적인 성취평가제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5년을 기점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전면 폐지하고, 동시에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하겠노라 천명

17) 단,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경쟁 풍토에 비추어 볼 때, 자격고사화를 추진할 경우 상위 등급 취득을 위해 시험 응시를 무한 반복할 소지가 있으므로 응시 횟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함.

18) 아울러 일각에서는 수능의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수능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 혹은 수능을 대학입학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자는 주장이 상존함. 이러한 주장은 현행 대입제도가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양분되고, 정시모집의 경우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에 기반하여 학생 선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입제도의 혁명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도입되기 어려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시를 완전 폐지하고 입시를 수시 중심으로 간소화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수능의 폐지 혹은 자격 확인용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음.

19) 논술전형은 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시행에 따른 과도한 중복비용과 수험생의 준비 피로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논술고사 제도로의 전환 혹은 수학능력시험 내에 논술·서술형 영역 도입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하였다. 내신 9등급제에 따른 교실 현장에서의 비교육적 경쟁문화를 고려할 때,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이른 시기에 성취평가제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만약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이 일부 교육특구 지역 고교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진다면, 상대평가 방식인 현재의 내신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신의 등급만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내신 9등급 체제가 상위권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이러한 경쟁적 풍토가 상위권 이하 학생들에게도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를 "상대평가 5등급제" 정도로 축소한다면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과열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내신 5등급제는 비록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 간의 강력한 변별력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대학 서열구조의 개선에도 유효하다.

끝으로, 대학입학 자체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학 간 서열구조의 완화를 유도해 볼 수 있다. 대학 입시를 일부 대학이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해당 대학 간의 입시 서열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취지이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대학 공동선발제, 대학입학보장제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공동 선발체제가 지금처럼 국공립대 위주로 논의되어서는 그 한계가 역력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서열 체제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리층'에 해당하는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모두 통합한다고 한들 수도권을 정점으로 하는 서열체제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을 어떻게 공동 선발체제 내로 유인할 수 있느냐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고등교육 관련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공동 선발체제와 연동시킨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노리는 상당수 대학들이 기꺼이 이에 응할 수 있다. 특히 입학자원의 급감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원하는 대학들은 충분히 이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일시적으로 재정지원을 노리고 공동선발에 참여하는 것은 고착화된 서열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역력하므로, 이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공동선발체제 내에 정착하도록 하는가가 공동선발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VIII. 성공적 개혁의 선결조건

이상의 입시제도 개혁은 어느 방안을 선택하던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제도 변화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도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학벌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더더욱 한국사회 전반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성숙한 뒤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으로는 3년 이상의 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개혁

에 따른 피해자로 남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정된 입시의 변화가 중학생 및 그 이하에만 한정된다면 급격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은 높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선별(대학입시단계)의 완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2차적 선별(채용단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채용단계인 2차적 선별이 여전히 학벌과 연줄 등에 연연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거꾸로 1차적 선별의 완화과정 역시 그 추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학벌과 학연의 중요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학의 서열에 지속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이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생 성장의 측면에서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예: OECD의 AHELO)가 개발되어야 하며[20], 이를 통해 대학 간 경쟁의 구도를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정보공시를 확충하여 학과 단위의 양질의 정보가 교육 수요자인 예비 대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고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역시 본격적으로 조사·공표될 필요가 있다. 기업에도 대학 및 학과의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여 채용 시의 심사가 대학 입학시점의 성적을 기준으로한 평가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 과정과 교육적 성과에 기초한 평가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채용과정에서는 스펙보다는 실무형 면접을 강화하고 정규 채용을 위한 인턴제의 활용을 늘림으로써 '학벌'이라는 불완전한 선별도구가 노동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양질의 선별도구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적용해 온 '블라이드 채용' 역시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이다. 또한 임금의 책정과 승진·승급에 있어서도 출신대학보다는 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인사평가 시스템이 보다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동시장 내에 만연한 각종 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중구조,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등도 학벌에 대한 집착과 불안을 조장하는 원인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0) OECD는 그동안 교수진 연구업적, 교육시설, 교육재정 등 투입요소 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학부교육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체제(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AHELO)의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해 왔음. 이는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 관한 역량중심의 평가로서,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지적 성장을 위해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둠.

참고자료

김영철, 「구직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 추정」, KDI 정책포럼, 제243호, 2011

김영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제64권 제1호, 2016

김영철・김희삼,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연구보고서 2012-12, 한국개발연구원, 2012.

김진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2007, pp.1~72.

이경희・김태일, 「대학교육의 성별 임금효과: 대학 순위와 전공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2007.